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인도네시아

Republic of Indonesia

2023년 4월 24일 | 책임연구원 이지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904.6천 km ² 	인구 2.7억 명 (2022)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GDP 1.3조 달러 (2022) 	1인당GDP 4,798달러 (2022) 	통화단위 Rupiah (IDR) 	환율(US\$기준) 14,849.85 (2022) 

- 적도에 위치하며 약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의 도서국 인도네시아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 내에서 최대 경제규모(세계 16위) 및 최대 인구(세계 4위)를 보유한 국가이며, 우리나라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광물 등 부존자원과 팜오일, 고무, 커피 등 농산물이 풍부하며, 2.7억 명의 인구 중 약 40%가 24세 이하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04년 최초로 도입한 정·부통령 직선제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현재까지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 2019년 4월 연임에 성공한 Joko Widodo 대통령은 옴니버스 방식을 통한 고용창출법 제정과 인프라 개발 목적의 국부펀드 조성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시장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9. 18 수교 (북한과는 1964. 4. 16)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71년), 임업협정('87년), 이중과세방지협정('89년), 항공협정('89년), 투자보장협정('94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7년), 문화협정('07년), 범죄인인도조약('07년),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1년), 형사사법공조조약('14년), 국방협력협정('18년),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20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6,312,901	8,550,335	10,215,899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수입	7,594,696	10,725,095	15,734,850	석탄, 천연가스,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498건, 16,603,179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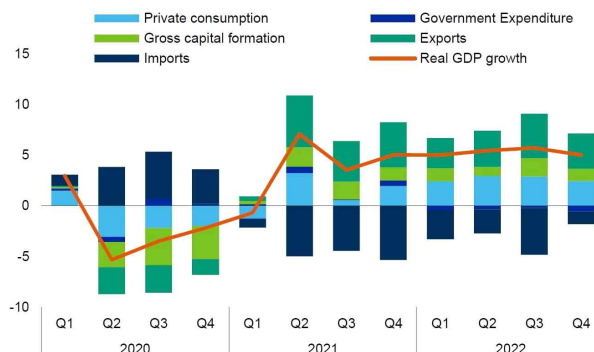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5.2	5.0	-2.1	3.7	5.3
소비자물가상승률	3.3	2.8	2.0	1.6	4.2
재정수지/GDP	-1.8	-2.2	-6.1	-4.5	-2.3

자료: IMF, EIU

민간소비 회복과 원자재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2년 5.3%의 경제성장 달성

- 인도네시아는 광물자원(석탄,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니켈), 농업자원(팜오일, 고무, 카카오, 커피), 관광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특히 광물자원의 수출 관련 제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등 광산업 부문의 발달이 장기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2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회복, 사상 최대 규모의 상품수출액 달성,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로 인한 관광 부문의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성장을 시현함.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년(2000~19년)간 연평균 5.3%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하면서 2020년 -2.1%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21년 2분기부터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 인프라 개발 사업 재개, GDP의 약 52%(2022년 기준)에 달하는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했으며, 2022년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의 3.7%를 훨씬 상회하는 5.3%를 기록함.
- 발전용 석탄, 팜유, 니켈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2022년 원자재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132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함. 상품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2,919억 8,000만 달러, 무역흑자 역시 사상 최고치인 544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함.
-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상품수출 중 광물성 연료(HSC 27)와 팜유(HSC 15)가 각각 19.9%, 12.8%를 차지함.

[그림 1] 인도네시아 분야별 경제성장률 기여도(2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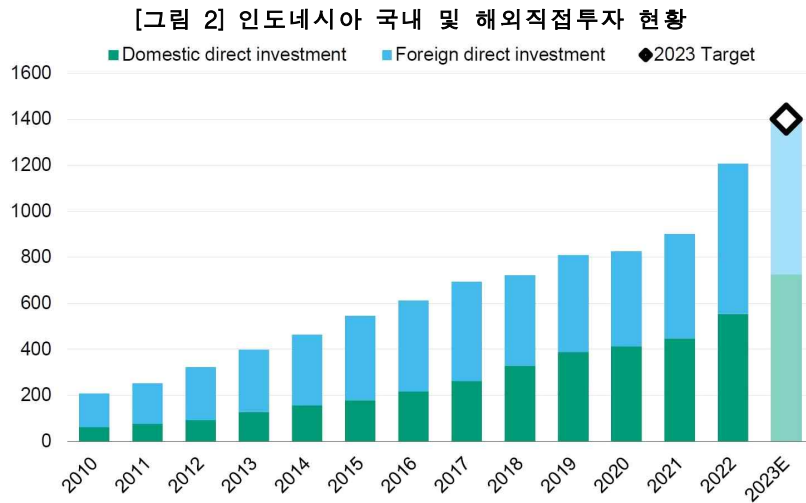
자료: Statistics Indonesia; Moody's Investors Service

국내경제

-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의 FDI 유입은 전년 대비 44.2% 증가한 45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투자액(국내 투자 포함)도 34% 증가했음. FDI는 주로 금속(24%)과 광산(11.3%) 분야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자재 관련 다운스트림(정제, 정련 등)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임.

* 투자국별로는 싱가포르가 13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82억 달러), 홍콩(55억 달러), 일본(36억 달러), 미국(28억 달러) 순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업 부문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주요 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원석·원광의 수출을 금지하여 제련과 관련한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09년 제정된 '신광업법'에 따라 시기별로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부가가치 창출과 투자 유치 목적으로 광물 수출업체들에 제련소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작년 인도네시아는 석탄과 팜오일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자료: BKPM and Moody's Investors Service

2023년 경제성장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할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에도 낙관적인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작년 수준의 성장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5~5.3%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IMF와 EIU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함.

[표 1] 주요 기관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IMF ('23.04)	ADB ('22.12)	World Bank ('22.12)	EIU ('23.03)	Fitch Solutions ('22.11)	Bank of Indonesia ('22.12)
2023년	5.0	4.8	4.8	4.7	4.8	4.5~5.3

국내경제

- 2023년 인도네시아의 상품수출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광산업 및 철강 다운스트림 산업의 성장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관광산업도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니켈 생산량 세계 1위인 인도네시아는 현재 니켈 원광 수출을 중단한 상태이며, 올해 보크사이트(bauxite)와 구리 정광도 수출 중단 계획을 밝힘에 따라 원광을 수입하던 외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공장 설립 등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중앙은행 목표치를 다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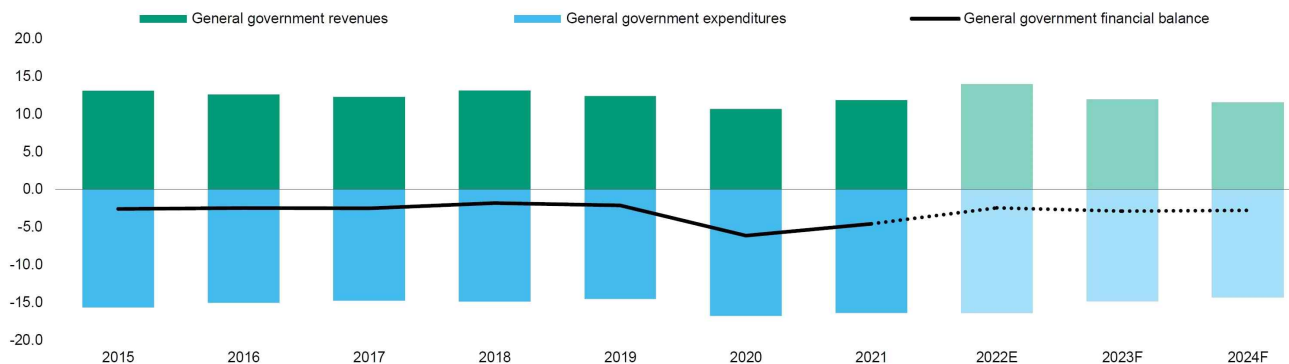
- 2022년 인도네시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4%를 다소 상회하였음.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작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등하는 국제유가로 인해 연료 보조금이 할당된 예산의 범위를 훨씬 상회하자 연료 보조금 폐지를 결정하고 유류 가격 인상을 단행함.
 - 소비자물가는 2022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으나 2023년에도 식품 및 연료 가격 상승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EIU는 올 중반까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를 상회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국제 상품가격 상승 둔화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9%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4%대로 전망하고 있음.
 -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년 9월 7년래 최고치인 5.9%를 기록했지만, 올해 2월에는 5.47%로 소폭 하락했음. 9월의 소비자물가 급등은 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 및 교통비 상승에 기인함.
 - 한편, Reuters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현재 5.75%인 기준금리를 올해 내내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런 전망이 가능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올 2월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동결하면서, 기준금리를 5.75%로 동결하더라도 2023년 1/4분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에서 오차범위 1%p 구간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3.5%로 한동안 유지했으나, 물가 상승이 심화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총 225bp)을 단행하였음.*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1.2월 기준금리를 인하(3.75%→3.50%)한 이후, 2022.8월 3.75%, 2022.9월 4.25%, 2022.10월 4.75%, 2022.11월 5.25%, 2022.12월 5.5%, 2023.1월 5.75%로 각각 인상한 바 있음.

국내경제

2023년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소폭 확대되겠으나 GDP 대비 3%의 국가재정법 상한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적자 한도(GDP의 -3% 이내)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당 법령 적용을 3년 간(2020~22년) 유예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의회는 2003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정부지출이 늘어나자 2020년 3월 국가재정법이 정한 재정적자 상한선을 최대 3년 동안 초과할 수 있다는 새 법안을 제정하였음. 동 법안은 별도의 특별법이 추가로 제정되지 않는 한 2023년부터 다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명시함.
 - 코로나19 이전 GDP의 -2%대를 유지하던 재정수지는 2020년 GDP의 -6.1%, 2021년 GDP의 -4.5%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GDP의 -2.3%의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1년 앞당겨 상한선(GDP의 -3%) 아래로 축소됨. -2.3%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세법 개정과 상품 수출가격 인상 등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30.6% 증가하며 적자 비율이 감소한 결과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세율을 10%에서 11%로 1%p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1년 제7호 법률인 조세조화법(HPP, 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에 따르면 2025년에 부가가치세율이 한 차례 더 인상(11% → 12%)될 예정임. 아울러 4개 구간으로 이루어졌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 35%가 적용되는 초고소득자 구간을 추가하였음.*
- * 소득세율 과세표준: △연소득 6,000만 루피아 이하 5%, △6,000만~2억 5,000만 루피아 15%, △2억 5,000만~5억 루피아 25%, △5억~50억 루피아 30%, △50억 루피아 초과 35%.
- 2023년 재정수지는 2022년에 비해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여 상한선(GDP의 -3%)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인도네시아 GDP 대비 재정수지 추이(%)



자료: Ministry of Finance; Moody's Investors Service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수지	-30,633	-30,279	-4,433	3,511	13,216
경상수지/GDP	-2.9	-2.7	-0.4	0.3	1.0
상품수지	-228	3,508	28,301	43,806	62,682
상품수출	180,725	168,455	163,402	232,835	292,548
상품수입	180,953	164,948	135,101	189,029	229,866
외환보유액	114,776	122,707	128,398	131,405	124,178
총외채	375,430	402,106	417,532	415,662	421,648
총외채잔액/GDP	36.0	35.9	39.3	35.0	32.0
D.S.R.	8.8	12.6	18.4	14.5	11.2

자료: IMF, EIU

원자재 국제가격 급등으로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 기록

- 인도네시아 경제는 석탄, 원유·가스, 철광석 등 원자재 및 팜오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에 따라 상품수지 규모가 좌우되고 있으며, 관광 수입(서비스수지),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과실 송금(본원소득수지), 해외근로자 국내 송금(이전소득수지) 증감도 경상수지 규모에 영향을 미침.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2022년 상품수출액은 전년 대비 26.1% 증가한 2,925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주요 수출상품은 화석연료, 동·식물 기름, 기계류, 자동차 등임.

[표 2]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 전망(억 달러)

구분*	2021	2022	2023 ^f	2024 ^f	2025 ^f
경상수지	35	132	-15	-153	-347
상품수지	438	627	515	305	136
서비스수지	-146	-200	-193	-153	-191
본원소득수지	-320	-358	-432	-414	-414
경상수지/GDP대비(%)	0.3	1.0	-0.1	-1.1	-2.1

주) 이전소득수지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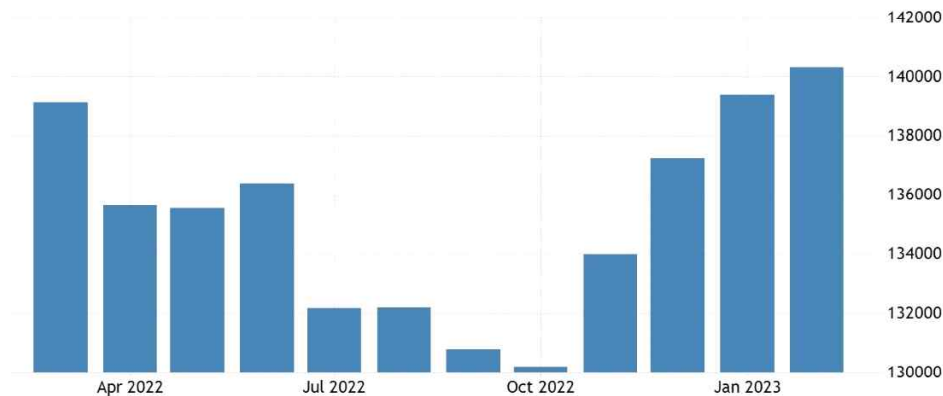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은 견실한 내수 경기, 해외 송금, 국내은행 계좌를 통한 수출 결제대금 수취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2023년 2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1,403억 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403억 달러는 6개월치의 수입자금 조달 및 정부외채 상환액에 해당하며, 국제 적정 기준치인 3개월치 수입액을 상회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해 2019년부터 정부령(PP No. 1/2019)을 통해 천연자원 수출업체는 외화로 결제대금을 받을 시 국내은행 계정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23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국내은행으로 결제받은 대금을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천연자원은 광업, 작물재배업, 임업, 어업 분야의 생산물을 포함하며, 수출로부터 발생하는 대금을 외환은행 특별계좌에 예치해야 함.

[그림 4] 인도네시아 외환보유액 추이(백만 달러)



자료: Trading Economics; Bank Indonesia

경제규모 대비 외채 비중은 비교적 양호

- 경상수지 적자 보전 및 인프라 투입 자원 확보를 위한 대외차입 등으로 외채잔액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최근 수년 간 30%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GDP 규모가 감소하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차입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이 39.4%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의 안정세와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으로 GDP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2년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은 30% 초반으로 감소함.
- 인도네시아는 총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2020년 200%대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2021년부터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2022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130%대까지 감소함.

구조적취약성

대외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

- 서민들에게 저렴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연료 보조금 지급, 원자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상품수출, 외국자본에 크게 의존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함.
- **[연료 보조금]** 인도네시아는 2004년부터 석유 수입국으로 전환하여 국내 석유 수요의 약 60%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대선 공약으로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초기에 부분적으로 보조금을 폐지 및 삭감하기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원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연료 보조금 지급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9월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연료 가격 30% 인상을 단행함.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30% 인상된 연료 가격은 다른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일부 노동자와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유 가격 인상으로 2022년 연료 보조금으로 할당된 예산을 152조 루피아에서 502조 루피아까지 확대하려고 했으나, 고유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9월 보조금 삭감을 결정함.
 - 인도네시아에서 연료 보조금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2대 대통령인 수하르토(Suharto)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폐지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함.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보조금 삭감을 권고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민들과 석유업계의 반발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함.
 - 연료 보조금은 국가 예산이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하며, 보조금이 국가 예산의 16%(2022년 기준)를 차지하여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함. 아울러 도입 당시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보조금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원자재에 편중된 수출]** 인도네시아의 핵심 수출상품인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은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단일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무역수지가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에서 2020년 석탄이 10.5%, 2021년 팜오일 9.1%, 2022년 식품이 20.4%를 차지함.
 - 아울러 원자재 수출은 국가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재를 단순 판매하는 저부가가치 교역 구조에서 탈피하고 국내에서 가공 및 제조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교역구조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핵심 광물자원을 단순 원자재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광물들을 국내에서 가공하여 고부가가치의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자원 산업의 다운스트림화를 추구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주원료인 니켈 등의 전략광물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 문제로 작년 석탄과 팜오일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였음.
- **[국외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인프라 개발]**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과 낙후된 인프라는 국가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강조했으며, 실제로 그의 재임 동안 많은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아울러 2019년 재선에 성공하고 국가 숙원 사업이었던 수도 이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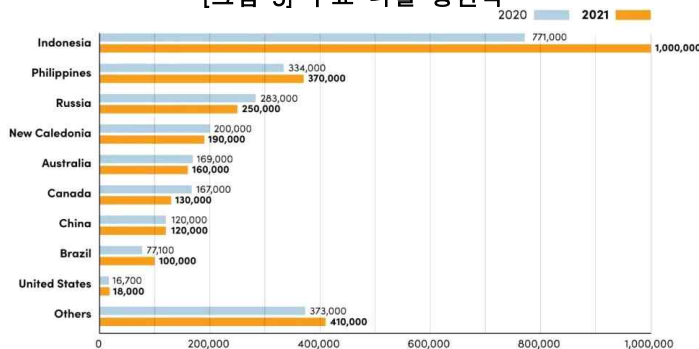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공적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설 부문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자원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수도 건설의 경우 예산규모가 466조 루피아(약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체 예산의 19.2%만 재정지출로 충당하고, 54.4%는 PPP로 조달하며, 26.4%는 민간기업 및 국영기업이 담당할 계획임. 추가적인 자원 확보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과 국유지(자카르타 및 동부 칼리만탄)의 상업화가 고려되고 있음.

성장잠재력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인구 보유

-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원과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 대두, 경제안보 측면에서 자원 확보의 중요성 강화 등 최근의 세계경제 상황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생산량 세계 1위인 팜오일을 비롯하여 고무, 카카오, 커피 등 풍부한 농산물과 2차전지 양극재 원료인 니켈(세계 매장량의 22%),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등 핵심 전략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이기도 함.
 -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총인구 2.7억 명 중 약 70%가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함.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실시한 2020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1년 53%에서 2020년 70%로 증가했고, 향후 해마다 270만 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40.6%, 14세 이하의 잠재적 노동인구가 전체의 23.9%로, 인구 보너스*에 따른 경제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됨. 최근 15년 간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 비중이 약 7%에서 20%(세계은행 추산 5,200만 명)로 증가하는 등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내수시장 발달이 진전되고 있음.
- *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도 증가하는 현상

[그림 5] 주요 니켈 생산국



성장잠재력

원자재 가공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 육성 추진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니켈을 포함한 핵심광물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에서 제련해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겠다고 발표함. 단순 원자재 수출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국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외국 기업이 원자재를 채굴해 바로 수출하는 대신 이를 제품 형태로 가공해 수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18년 국내가공요구사항(domestic processing requirements, DPR)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니켈 광석을 수출 전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2022년 초에는 석탄과 팜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6월부터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금지하고 이를 국내에서 가공하겠다고 선언함.
- 한편, EU는 2021년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석 수출 금지와 광석에 대한 DPR 적용에 대한 국제무역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제소했으며, WTO 패널은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위반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원광 수출 금지 규제를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외에도 석탄-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 DME) 프로젝트를 통해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 가스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실리카(silica)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 웨이퍼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석을 한두 단계 정제하는 수준을 넘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으로 가공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운스트림 육성 정책의 적용 대상을 보크사이트, 금, 구리, 팜유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

- Google·Temasek·Bain&Company의 'e-Conomy SEA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2년 770억 달러(거래액 기준, Gross Merchandise Volume)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19%씩 성장해 1,300억 달러에 이르고, 이후 연평균 11%씩 성장해 2030년에는 2,200~3,6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성장동력으로는 큰 규모의 내수시장,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가 다수인 인구구조, 해외자본의 유입, 국가의 육성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확산된 재택근무·온라인 학습 등을 꼽을 수 있음.
- 디지털 경제의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ICT 인프라와 낮은 금융 포용성 등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지만, 최근 인프라 건설과 전자결제 시스템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가 일부 개선되고 있음.
- 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 간 IT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33개 주를 모두 광케이블(35,280km 해저 케이블, 21,870km 지중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팔라파 링(Palapa Ring)'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 청사진 2025(BSPI 2025, Indonesia Payment Systems Blueprint 2025)'를 수립하고 소비자가 사용 중인 디지털 플랫폼에 구매받지 않고 하나의 QR코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한 표준화된 전자결제 시스템인 QRIS(Quick Response Code Indonesian Standard)를 도입함.

정책성과

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인프라 개발 가속화 및 전략 산업 육성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개발 및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2월 '인도네시아 투자관리청 (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 INA)'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최초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를 조성함.
- 국가 예산을 안정화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한 국가의 잉여수익 또는 적립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일련의 실물 및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국부펀드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국부펀드는 펀드를 자본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민간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INA는 교통, 공급망, 물류, 디지털 인프라, 녹색경제, 의료 서비스, 금융, 기술, 관광 분야의 인프라 사업 및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투자를 모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공항, 항구, 광섬유, 데이터 센터, 수도 이전 개발 등이 포함됨.
- 2021년 INA 출범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INA에 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2024년까지 2,00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함. 2022년 10월 말 기준 INA는 65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러 펀드와 투자자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의 공동 투자를 유치했음. 주요 투자자는 싱가포르 투자청(GIC), 아부다비 투자청(ADIA),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 캐나다 퀘벡 주 연기금(Caisse de dépôt placement du Quebec), 중국 실크로드 펀드(Silk Road Fund) 등임.

위헌 논란의 대상이었던 고용창출법은 2020년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

-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0년 10월 고용 창출, 투자 유치, 규제 개혁을 위해 노동법 등 76개 법률 1,200여 개 조항을 일괄 개정함. 친기업적인 개혁에 대해 해외 투자자를 포함한 기업 측은 크게 환영했으나, 노동계와 일부 환경·시민단체는 개정된 법안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함.
- 특히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고용창출법(UU Cipta Lapangan Kerja)의 경우 옴니버스(omnibus) 법이라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개의 법 조항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의회에서 단 한 번의 투표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임. 동 법률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코위 정부의 개혁 중 하나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에 걸림돌로 여겨지던 노동 경직성을 완화하고 상호 모순적이고 불필요한 규정을 간편하게 개정하는 것이 핵심임.
- 법 개정의 결과 법령상 명시적으로 투자가 금지된 6개 업종과 안보와 관련된 산업 등 중앙정부만 수행 가능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석유, 화학, 반도체, 자동차, 인프라 등 245개 국가 우선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아울러 퇴직수당 감축(근로자 귀책사유 시 미지급 등), 비정규직(고용기간 통상 2년 → 5년) 및 외국인 근로자(정부 허가 불필요 직종 확대) 고용 제한 완화, 실업보험 도입(정부가 6개월분 급여 지급),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 등 고용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정책성과

- 2020년 11월 인도네시아 근로조합총연맹(KSPI)과 전국근로조합총연맹(KSPSI AGN)은 고용창출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고용창출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기각했지만,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으므로 정부와 의회는 전체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고용창출법을 개정하지 않고 2022년 12월 말 세계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법적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 법 개정을 강행하였음.
-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은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로 확정되려면 긴급명령 발동 후 열리는 첫 번째 의회 회기 내에 승인받아야 함.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의회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고용창출법은 정식 법률로 확정됨.
- 고용창출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고용창출법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됨으로써 그동안 존재하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투자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친환경 정책의 강화

- 2022년 G20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국내의 주요 환경 문제를 개선할 기회로 삼고 기존의 성장과 발전 중심의 정책을 넘어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동남아 전기 자동차 허브 등 친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했음.
- 인도네시아는 작년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탈석탄 지원 계획을 담은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에 서명하면서 JETP의 지원을 받는 두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동 회담에서 2050년까지 전력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 JET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성한 네트워크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함.
- G7 국가들과 덴마크, 노르웨이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향후 3~5년 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각각 100억 달러씩 조달해 총 200억 달러(약 26조 원)를 인도네시아에 지원키로 함. JETP는 에너지 전환 정책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광부 및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교육, 일자리 창출까지 지원함.
- 2022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탄소를 부과하려 했으나, 로드맵 조정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7월 1일) 연기한 후 세계 경기 침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 인플레이션 등으로 지금까지 탄소세 부과를 연기하고 있음. 그러나 탄소세와 달리 인도네시아가 추진하는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의 또 다른 축인 배출권거래제는 2023년 2월에 도입되었음(1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한정).

정책성과

- 세계 팜오일 생산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2018년 9월부터 모든 경유 차량과 기계류에 팜오일 원유를 20% 섞어 만든 바이오디젤 'B20'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팜오일 30%가 혼합된 'B30',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팜오일 35%가 혼합된 'B35' 사용을 의무화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추후 'B40'을 도입하는 등 계속해서 팜오일 비율을 증가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는 2.7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 중산층의 구매력 향상,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인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등 전기차 생산 및 판매에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동남아의 전기차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2021년 6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2040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2050년부터 전기차만 신규 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2025년까지 총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포함)의 비중을 20%, 2030년까지 25%, 2035년까지 30%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정치안정

2024년에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총선·지선이 모두 같은 해에 치러질 예정

- 2024년에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전국구 국회의원(Dewan Perwakilan Rakyat, DPR)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Dewan Perwakilan Daerah, DPD),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Dewan Perwakilan Rakyat Daerah, DPRD)을 선출하는 총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선이 인도네시아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해에 치러질 예정임.
- 같은 날 치러지는 대선과 총선은 2024년 2월 14일, 지선은 11월 27일에 예정되어 있음.
- 지지율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선 후보의 부재로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상 3선 도전이 불가능한 조코위 대통령의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9년 재선에서 승리한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10월에 종료될 예정임.
- 실제로 조코위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3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집권 마지막까지 60~70%대를 유지하는 그의 지지율은 20%를 넘지 못하는 유력 대선후보들과는 큰 차이가 있음.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과 참모들 사이에서 수년 전부터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헌법을 개정해서 그가 3선에 도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유력 대선 후보로는 중부 자바 주지사인 Ganjar Pranowo,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조코위에 패했던 Prabowo Subianto 국방부장관, 현 자카르타 주 지사이자 조코위 1기 정부의 교육부장관이었던 Anies Baswedan 등이 꼽히고 있음.

선거를 앞두고 짙어지는 종교적 보수화

- 무슬림이 국민의 절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서구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는데, 공적인 사안에 대해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구분되는 경향이 있음.
- 인도네시아 정당정치에서 좌파(left) 혹은 진보는 종교와 공적 영역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주로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정당들로 구성된 중도 좌파는 종교적 이념을 존중하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 특정한 종교를 옹호하는 것을 경계함. 중도 우파의 경우 대중 이슬람 조직과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당들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가 되는 것에는 반대함. 반면 우파(right)는 이슬람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정당이라 할 수 있음.
-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 사회가 종교적으로 보수화됨에 따라 최근 선거 때마다 종교를 이용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최초로 대선·총선·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과 종교적 보수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사회안정

- 금년 3월 국제축구연맹(FIFA)은 오는 5월 예정되었던 2023년 20세 이하(U-20) 월드컵의 인도네시아 개최권을 종교적인 논란으로 박탈하였음.
- 유럽 지역 예선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대회 참가가 뒤늦게 결정되자,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을 이유로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한 인도네시아의 강성 이슬람 단체가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반대하며 입국 시 이스라엘 선수들을 납치하겠다고 위협을 가함. 이러한 상황을 보수 무슬림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얻을 기회로 생각한 정치인들이 이스라엘 선수단 입국 거부 주장에 동참하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대회 개최가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함. 인도네시아는 1962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때도 이스라엘의 입국을 거부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가 FIFA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거나 다른 스포츠 행사 유치권이 박탈될 가능성을 제기함.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2015년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축구협회 행정예 간섭한다는 이유로 FIFA로부터 1년 간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당하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음.

사회안정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 논란이 된 형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

- 2022년 12월 인도네시아 국회는 3년 동안 보류되었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안에는 인권과 자유를 축소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는데, 주된 명분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법을 그대로 차용한 현행법을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맞게 바꾸자는 것임. 인도네시아 형법은 1918년에 네덜란드의 빌헬미나(Wilhelmina) 여왕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1945년 독립할 때 당시의 형법을 큰 수정 없이 그대로 계승함. 시간이 흐르며 식민주의 유산이 아닌 보다 인도네시아의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당초 2019년 형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에 당황한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에 형법 개정안 심의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개정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개정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이유는 새롭게 바뀐 형법이 과거의 것보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구속할 소지가 많다는 데 있음.
- 개정된 형법은 결혼 전 성관계 및 혼외 동거 금지,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한 모독죄 확대 적용, 국가 및 국가기관에 대한 모독죄 확대 적용, 의학적 사유가 없는 낙태의 금지 등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사회가 보수적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혼외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417항으로, 동 조항에 따르면 동거(cohabitation)를 포함하여 혼인 외에 합의된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기존의 형법에서는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였지만 혼전 성관계에 관한 처벌 조항은 없었음.
- 이외에도 대통령, 부통령, 종교, 국가기관, 국가 상징물(국기, 국가) 등을 모욕하는 행위는 징역 3년 형에 해당하며, 의학적 위급 상황이나 성폭력에 의한 임신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함.
- 국제사회와 다국적 기업은 형법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에 큰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법률이 관련된 가족의 신고로 처벌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라고 강조했음. 그러나 외국인이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성관계를 갖거나 동거하고 해당 인도네시아 가족이 외국인을 고발할 시 개정된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관광업계는 형법 개정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막 회복을 시작한 관광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Sung Kim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새 형법 개정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와 관광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함. 새 형법은 시행을 위한 부속 법령 제정으로 인해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적용될 예정임.

사회안정

Moody's는 인도네시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환경 위험(매우 높음)과 사회적 위험(다소 높음)에 대한 노출을 통제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제도적·경제적 회복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함. Moody's는 ESG 요소가 인도네시아의 정부 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함.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기후변화 영향으로 발생한 해안 침수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 지진, 쓰나미, 화산 등의 자연재해는 환경 분야의 주요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음. 농업 생산, 기반시설, 식량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는 폐기물, 오염과 함께 인도네시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임. 아울러 경작지 확보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벌목은 토양 침식과 삼림 황폐화를 초래함. 이를 반영하여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비율* 감소 현상은 긍정적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GDP 대비 교육과 보건 재정지출 비중은 유사한 신흥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반영하여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 부양비율은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지배구조]** 정부의 재정정책,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법치주의, 부패 통제 등 제도가 비교적 안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의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비동맹 중립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적극적인 외교 노선 고수

- 인도네시아 역대 행정부는 '자유롭고(독립적)-적극적'이라는 의미의 'bebas-aktif'라는 외교 원칙을 계승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어로 'bebas'는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세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aktif'는 국제적 사안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함.
- 1948년 당시 인도네시아 부통령이었던 하타(Mohammad Hatta)는 미국과 소련이 두 진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주의를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인도네시아의 외교 원칙으로 'bebas-aktif'를 처음 언급했으며, 이후 모든 정권이 각자의 방식대로 'bebas-aktif'를 실천하고 있음.
- 2022년 동남아 국가로서는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처음으로 G20 의장국을 수행한 인도네시아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개된 서구와 러시아 간 갈등 속에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외교적 자율성을 추구했음.
- 서구 중심의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와 함께 경제제재를 가했으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의 정상회의 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기를 원했음.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작년 6월 29~30일 이틀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및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을 각각 만나 두 정상 모두에게 G20 정상회담에 참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러시아가 G20 정상회의에 참여할 경우 정상회의 참여를 취소하겠다는 일부 국가의 보이콧 선언을 수습함.
- 인도네시아는 개도국을 대표해, G20 국가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코로나19의 극복, 경제 회복, 기후 회복, 탄소 배출 감소를 실천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 국가 간 격차가 존재하는데,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도 했는데, 그동안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하지 못했던 '손실피해기금(Loss and Damage Fund)*'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에서 정식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으며, 이후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Sharm El Sheikh)에서 진행된 UNFCCC COP27에서 참가국들은 일정을 이틀 연기하면서까지 기금 설립에 합의함.**
-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고통을 겪은 개도국에 선진국들이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
- ** UNFCCC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원 마련이 의제로 채택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 총회의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제27차 당사국 총회 기간 열띤 협상 끝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합의함.
- 인도네시아는 G20 의장국을 수행하면서 226건의 다자간 프로젝트·프로그램·이니셔티브와 140건의 양자간 프로젝트를 체결했으며(총 715억 달러), G20 정상회의에서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3~5년 간 총 20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약속받음.

외채상환태도

구제금융·채무재조정 이후 원리금 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SDR111억(157.1억 달러 상당)을 지원받았으며, 외채상환 부담 증가로 채무상환기간을 2010년까지 유예받았으나 경제여건 개선, 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힘입어 2006년 전액 조기상환하였음.
- 한편, 파리클럽을 통하여 체결된 총 8건의 채무재조정 협약 중 5건*에 대한 원리금은 전액 상환하였으며, 1998~2002년 중 체결된 채무재조정 3건에 대한 원리금은 안정적으로 상환 중임.
 - * 1966·67·68·70년 및 2005년, 총 53.9억 달러 상당
- 재조정된 상환계획에 따르면 1998년과 2000년 체결 건은 ODA 잔액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며, 2002년 체결 건도 상환 시작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미상환 원리금 잔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표 3] 인도네시아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협약 개요(상환 진행 건만 포함)

체결연도	대상 건	대상금액 (억 달러)	상환기간(거치기간)	
			ODA	비(非)ODA
1998	1998~2000년 중 만기 도래분	41.8	20년(n.a.)	11년(n.a.)
2000	2000~2002년 중 만기 도래분	54.5	20년(7년)	15년(3년)
2002	2002~2003년 중 만기 도래분	54.7	20년(10년)	18년(5년)

자료: Paris Club

- 한편, 202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신잔액은 143.2억 달러(단기 32.8억 달러, 중장기 110.4억 달러)*로 이 중 2.9억 달러를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됨.
 - * 주요 ECA 여신잔액(억 달러): 일본(46.7), 한국(28.4), 프랑스(17.2), 캐나다(11.5), 등
- 단, 연체비율이 2.0%로 낮고 재조정된 스케줄에 따라 연체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는 등 상환태도는 대체로 양호함.
- 미 수은, 영국 UKEF, 독일 Hermes는 공공·민간 부문 모두 만기 제한 없이 인수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영국 UKEF는 중장기 인수자금에 대해서는 현지화 취급도 가능하나, 종교·인종 갈등에 따른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 시 프로젝트 소재지에 따라 여신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표명함.
 - * 3개 ECA 여신잔액(2022.3월) : 미국 0.8억 달러, 영국 3.3억 달러, 독일 8.8억 달러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2.06)	3등급 (2021.06)
Moody's	Baa2 (2018.04)	Baa3 (2017.02)
Fitch	BBB (2017.12)	BBB (2016.12)

OECD,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양호한 기존 신용등급 유지

- OECD는 2012년 국제수지 개선 및 외국인투자 등 자본 유입 증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임.
- 2020년 3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루피아화 가치가 일시 폭락하고 정부가 코로나 긴급대응을 위해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한 이후, 4월 S&P는 정부 재정 및 채무부담 악화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한 바 있음. 그러나 2022년 4월에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향상으로 대외부문 또한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용등급 전망을 다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하였음.
- Moody's와 Fitch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용등급 및 전망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양사는 정부의 채무부담이 동일한 신용등급의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며, 세계 16위의 GDP 규모, 인구 4위의 내수시장 등 거대 경제규모가 대외충격 흡수기제로 작용한다고 평가하였음. 단, 낮은 재정수입(GDP 대비 14.4%, 2022년 추정)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저하, 외자 유출 및 환리스크에 노출된 채무구조, 재정관리법 적용 유예로 인한 공적채무 증가 가능성 등은 위험요소로 지적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년(2000~19년)간 연평균 5.3%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하면서 2020년 -2.1%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21년 2분기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프라 개발 사업 재개, GDP의 약 52%(2022년)에 달하는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빠르게 경기 회복세로 전환했으며, 2022년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의 3.7%을 훨씬 상회하는 5.3%를 기록함.
-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이고 견실한 내수 경기, 해외 송금,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한 수출 결제 대금 수취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경상수지 적자 보전 및 인프라 투입재원 확보 등을 위한 대외 차입 등으로 외채잔액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최근 수년간 30%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선이 모두 치러질 예정이며,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선 후보의 부재로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